

올바른 역사용어가 올바른 역사를 만든다



글_이규수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역사는 역사를 서술하는 주체의 몫 올바로 이름 짓고 부르는 것만큼 중요한 '역사적 작업'은 없어 역사용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계기로 삼아야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역사용어를 바로 써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여, 올바른 역사용어가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유명한 언어학자의 말은 빌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의 의식을 구속하고 제약한다. 곧 잘못된 용어로 쓰인 역사는 왜곡된 역사이해와 역사인식을 낳는다. 말을 올바르게 쓰고 이름을 올바르게 붙이는 일, 역사용어를 올바르게 이름 짓고 부르는 것만큼 중요한 '역사적 작업'은 없다는 말일 것이다.

책을 소개하기 전에 역사용어를 둘러싼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두자. MBC가 방영한 <뉴스투데이> 프로그램(2005년 1월 10일)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며 '이조 600년사'라고 발언한 부분을 가리켜 "이조시대는 식민사관에서 유래한 용어"라 비판했다. 이명박 시장의 무의식적인 말실수로 넘길 수 있겠지만,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방송사의 지적은 아주 정확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무색할 만큼 방송관계자 역시 잘못된 역사용어를 사용한다. 예컨대 뉴스 진행자들이 "내년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는 해"와 같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알다시피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의 입장에서 조약을 표현한 용어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어이다.

이런 사례는 역사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의 단면을 보여준다. 1992년부

터 시행된 제6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서 '을사보호조약'이 '을사조약'으로 변경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일컫곤 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을사조약' 역시 적절한 역사용어는 아니다. '제2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도 타당하지 않다. 외교권 위탁은 정식계약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한일 조약안은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을사보호조약'의 대안으로 국사교과서가 제시한 '을사조약'은 이제부터라도 '한일외교권위탁조약안' 또는 '한일외교감리조약안'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을사보호조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거부정책'이 '쇄국정책'으로, '일본식 성명강요'가 '창씨개명'으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가 '중군 위안부'로, '교도소'가 '형무소'로,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로 여전히 사용되는 것은 오랜 입말의 관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용어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역사용어와 역사 기억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자기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또 이 문제는 다시 '누가 기억을 관리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왜냐하면 기억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사물의 인식 방향을 지배하며, 자신의 기억에 스스로 이름 붙인다는 것은 곧 '주체적 역사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사용어는 객관적인 역사인식과 가치관에 근거하면서 일반인이 널리 쓰는 보편 용어를 선택한 것이어야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여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용어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의 재검토 작업은 곧 한국사회의 '근대사회 만들기'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동안 잘못 쓰이거나 주체에 따라 달리 쓰이는 40개의 역사용어(또는 용어군)를 재검토한다. 근대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용어가 쓰인 경우, 학문적 검토 없이 잘못된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다가 학술용어로 정착한 경우처럼, 우리 주변에는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잘못된 용어 혹은 의미가 탈색되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 역사용어가 많다. 이 책은 그러한 역사용어를 엄선해 그 대안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용어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용어들이 논쟁 중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풀어놓았다. 35인의 학자들이 전공 분야의 연구 내용을 일반인을 위해 대중적으로 서술한 이 책은 역사용어 바로쓰기를 위한 학자들의 노력과 그 결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역사용어의 진실과 현실을 둘러싼 논쟁, 그 대안을 모색한 40편의 글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선정된 주제와 필자에 따라 내용과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점은, 책의 집필에 참여한 학자들이 자기 연구 분야와 관련된 글을 썼다는 점, 글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썼다는 점이다.

고구려·백제·신라 세 나라만 공존한 기간은 98년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삼국이 아닌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김태식),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이 공식 명칭이 아니며, 여기에 걸맞은 제대로 된 용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상찬, 이태진),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에 보관된 '북한 노획문서 컬렉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글(정병준)과 남과 북이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박명림)처럼 이 책에 실린 글은 모두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물 또는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연구 성과의 대중화'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최근 학계의 신선한 주장과 목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의 학문 영역에서만 머물던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작업은 역사용어가 학문적 영역과 일상의 영역 모두에서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각각의 글은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뿐 아니라 집필자의 다양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이는 아직도 한국 역사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색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이름 붙여질 수 있는 현상을 단 하나의 역사용어만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이 책의 시도는 앞으로 역사용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역사는 역사를 서술하는 주체의 몫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족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역사용어는 주체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한글서체**